



민주 김홍업 공천 갈등 증폭

김씨 “유권자 심판 받겠다”
시민단체 낙선 운동 불사

김대중 전 대통령(DJ) 차남인 흥업씨가 23일 민주당의 공천장을 받고 4·25 무안·신안 보궐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당 대표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도 낙선운동을 결의하는 등 김씨의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공천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불민한 저로 인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김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가 아닌 국민의 신부를 꾼으로 무안·신안의 발전 및 민주평화 세력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전략공천 과정과 관련해 “유권자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이번 전략공천으로 민주당이 DJ의 사당화됐다는 평가는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영환 후보도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홍업씨

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무소속 출마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한 배경과 관련, 김씨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측면도 솔직히 고려됐다”며 “김 전 대통령도 ‘내가 평생 몸담아왔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천장 수여식에는 11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신중식, 최인기, 채일병 의원 등만 참석, 진통을 겪고 있는 당내 분위기를 반영했다. 특히, 조순형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한 전략공천은 민주당이 공당이기를 포기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지금이라도 김씨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철회하는 게 사태수습의 방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영환 후보도

전략공천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침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장상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김씨의 무안·신안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지역정서에 전혀 맞지 않고 정치적 후진성을 드러내며, 호남민에게 정치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적인 폭격”이라며 김씨의 선거 출마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또 이날 회견문을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통해 DJ에게 보내는 한편 김씨가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낙선행동까지 벌이겠다고 밝혔다.

광주YMCA, 광주경실련, 5·18기념재단, 목포YMCA 등 광주·전남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막대기만 끊어도 당 선된다”는 과거의 오만과 불손을 다시 또 연하고자 하는 구태정치를 괴롭히 거부한다”며 “김씨가 DJ 후광을 업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물연치를 드리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발레리나 강수진
동양인 최초로
獨 ‘무용 장인’ 영예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
무용수 강수진(40·사진)씨가 동양
인 최초로 ‘무용 장인’으로 인정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23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따르면 강씨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가 귀인(貴人), 장인(丈人)으로 공식 인정하는 ‘캄퍼 탠처린(Kammertanzerin)’으로 선정됐다.

‘캄퍼 탠처린’은 영국에서 일정한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 작위를 주는 것처럼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다.

1985년 세계 발레스타의 등용문인 로잔 국제발레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강씨는 이듬해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족연소 단원으로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수석무용수로 활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강씨는 빼어난 활약으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5년 전 발레단의 종신 단원이 됐다.

/연합뉴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남아공에 엑스포지지 요청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풀질 음밥보-누카(여) 부통령과 마르티너스 한 스칼 크레이크 환경관광부장관을 연쇄 접촉하고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케이프타운에서 음밥보-누카 부통령과 면담, 우리나라의 박람회 유치 계획 및 개최 능력을 설명하고 남아공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했다. 김 장관은 또 음밥보-누카 부통령을 통해 타보 읍비키 대통령에게 향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음밥보-누카 부통령은 엑스포 개최지 결정과정과 경쟁 도시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나라의 박람회 유치에 대해 호의를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면담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앞서 스칼크레이크 장관과의 회동에서 환경 및 해양보전을 주제로 하는 여수박람회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광양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광양지역 산업평화 선언식’에 광양제철소 54개 외주 파트너사 임직원과 시민들이 참석, 산업현장의 노사평화를 결의하고 있다.

“광양, 파업 없는 도시로”

광양제철소 54개 외주업체 ‘산업평화 선언’

광양제철소 54개 외주 파트너사가 지난 21일 광양시청 앞 야외공연장에서 ‘광양지역 산업평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웅 광양시장, 정준양 포스코 사장, 허남석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을 비롯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 임직원과 시민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초 광양제철소 10개 외주 파트너사들이 ‘항구적 노사평화 선언’에 뒤이은 것으로, 54개 외주파트너사 모든 근로자와 산업현장의 노사평화를 결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선언식은 최근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

화하고 세계 제1의 물류중심도시 철강산업 중추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 광양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는 노사 모두의 뜻을 한데 모은 것이다.

산업평화 선언문에서 근로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사용자측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평화’ ‘투자유치와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다짐하는 등 양측이 ‘지속 발전 가능한 광양 건설’을 결의했다.

이번 ‘산업평화 선언식’을 계기로 54개 외주파트너사 노사는 광양제철소의 비전인 ‘글로벌 넘버원 자동차차관 전문제철소 완성’에 적극 동참하고 신뢰와 대화, 화합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광양지역에 선진적

인 산업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지자체 비리 공무원

징계요청 66% 증가

감사원은 지난해 각종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배포한 연보에 따르면 지난 해 비로 인해 과연, 해임 등 징계조치가 요청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는 248명으로

자연 2005년 149명에 비해 66.4% 늘었다.

중앙부처의 경우 지난해 징계가 요청된 공무원의 수는 61명으로 지난 2005년 162명에 비해 6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日 만정

- 김종우



빛좋은 개살구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제한적 허용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들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황우석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이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를 핵이식하는 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배아연구를 허

용하는 안이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제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이날 회의에는 생명윤리계와 과학계의 민간 위원회들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등 정부 층 당연직 위원 등 전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체위원 20명 중에서 정부 층 당연직 위원과 과학계 민간위원 13명 만이 서면 결의에 찬성해 12명이 제한적 허용 층에 표를 던져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전원이 서면 표결에 불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시 설

광양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이 24일로 개청 3주년을 맞았다. 광양만청은 개청 이후 지금까지 16개 업체에 27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고,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도 매년 증가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배후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미래도 밝다고 한다.

하지만,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은 담당공무원조차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로 걸림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차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전히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을까.

투자 인센티브도 중동이나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뒤없이 부족하다. 입주기업의 75%가 세제 감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오죽했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차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전히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을까.

두바이의 경제자유구역 ‘자발알리’의 성공은 이른바 4무 정책(무세금, 무제한 외화거래, 무스포너, 무노동쟁의)에 기인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광양만청은 제대로 육성하는 길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도입뿐이다.

기초의원 연봉 인상 요구 합당한 일인가

기초의회 의원들이 보수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보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제택했다.

기초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자체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에 대해 유급제를 도입한 것이 불과 1년여 전이다.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허리띠를 줄리며 고생하는데 유급제 시행 1년여만에 연봉을 인상해 달라는 것은 실망스럽다.

인상폭도 납득되지 않는다. 부단체장의 연봉이 5천여만원에서 7천5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2.5배 올려 달라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시·군이 국고 지원 없이는 공무원의 인건비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생각해야 한다. 염불보다 잣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없다. 밥그릇을 챙기기 앞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감시해야 할 것이다.

에서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

유급화 이후 의정활동이 특별히 개선된 것도 없다. 의회는 의사장족수마저 제우지 못해 안전을 처리하지 못하는가 하면 관광성 외유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기초단체의 살림살이를 뻔히 아는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배부터 불리겠단다니 어이가 없다.

광역의회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유급보좌관제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기에 현행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유급 보좌관과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생각해야 한다. 염불보다 잣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없다. 밥그릇을 챙기기 앞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감시해야 할 것이다.

한, 대북정책 수정 공식화

“전작권 韓·美 합의 인정”

한나라당은 23일 지난 2월 한국과 미국간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따른 현실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지 않기로 당론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당내 대선주자들은 전작권 조기 전환 반대와 차기 정부에서의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폐라다임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정현근 의원)는 이날 북한을 국가적 실제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당내 경쟁과 의원들과 외부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당론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부를 적극 설치하기로 하는 등 대북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내의 인사 8명으로 구성된 대북정책 TF는 지난 2주간 비공개 논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오는 31일까지 당의 대북정책에 관한 시안을 강제집 대표에 보고, 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중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향적인 대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당내 경쟁과 의원들과 외부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당론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부는 순으로 집계됐다.
과음 횟수에 대해서는 응답자 44.9%가 ‘과음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주 1회’(44.6%), ‘주 7회’(5.7%), ‘주 3~4회’(4.2%), ‘주 5~6회’(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직장 회식’(43.7%)이 1순위였고 ‘각종 사회모임’(23.4%) ‘직장 내 스트레스’(13.0%), ‘개인적 스트레스’(10.8%) 순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